
 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보도	2020.4.21.(화) 조간	배포	2020.4.20.(월) (국제엠바고)

책 임 자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장 김 수 호(02-2100-2880)	담 당 자	윤 우 근 사무관 (02-2100-2881)
	기획재정부 국제통화팀장 심 승 현(044-215-4840)		박 기 학 사무관 (044-215-4841)
	한국은행 안정총괄팀장 신 현 열(02-750-6834)		박 정 민 과장 (02-750-6616)
	금융감독원 은행협력팀장 김 우 현(02-3145-7908)		조 은 정 선임조사역 (02-3145-7910)

제 목: 국제통화기금(IMF),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금융시스템의 복원력을 높게 평가

*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1. 추진 경과

□ IMF는 '19년 초부터 한국 등 12개국*을 대상으로 FSAP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 7개) 한국, 오스트리아, 덴마크, 홍콩, 이탈리아, 노르웨이, 미국
(자발적 신청 국가: 5개) 알제리, 라트비아, 필리핀, 남아공, 트리니다드 토바고

○ 한국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가*로 분류되어 정기적으로 FSAP 평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번 평가는 '03년, '14년에 이은 세 번째 평가였습니다.

* 금융업권의 규모,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성 등을 기준으로 29개국 선정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독일, 홍콩, 이탈리아, 일본, 인도,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싱가포르, 남아공, 한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미국, 영국

- FSAP 평가를 위해 IMF는 '19년 중 2차례의 현장평가를 실시했으며, 평가 결과를 정리한 금융시스템 안정성 평가(FSSA*) 보고서를 '20.4.21(화) 오전 6:30(한국시각) IMF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2. 주요 내용

- (총평) FSAP은 극단적인 상황이 현시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소를 조기 발견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 이를 위해 IMF는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하여 평가를 진행한 결과,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복원력(overall resilient)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코로나19 사태 이전 자료('19.6월 기준)를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 → 다만, FSAP의 스트레스 시나리오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의 크기·지속기간(depth and duration)을 ~~해~~반영하고 있음을 확인

- (취약요인) 다만, 저금리·저성장, 인구 고령화, 핀테크 발전 등에 따른 금융시장 경쟁 심화 등을 감안할 때, 일부 분야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① (가계부채) IMF는 가계부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관리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 하지만,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준하는 주택가격 하락 충격 등 발생시, 특히 고령층 차주의 취약성이 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② (개별 금융업권) 스트레스 이벤트가 발생해도 평균적으로 각 업권의 건전성·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평가했지만,

- (은행) 핀테크 발전이 은행권의 수익성·건전성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보험) 저금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생보업권의 영업이익이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국민연금) 현행추세 유지시 2057년 경 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 (핀테크) 오픈뱅킹의 법적근거 마련을 포함하여, 보안 및 운영상 리스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③ (정책대응체계) 높은 수준(high quality)의 미·거시건전성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있고, 가계부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의지(strong willingness to act)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다만, 금융안정성(financial stability)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한 협의체가 부재한 점을 취약요소로 꼽았습니다.

④ (금융업권별 감독) 전반적으로 업권별 국제기준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다만, 非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자본시장 및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서도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⑤ (정리체계) 국제기준을 전반적으로 이행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채권자손실분담제도(Bail-in*), 대형은행의 희생계획 작성 의무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은행 지급불능시 주주와 함께 채권자도 채권상각·출자전환 등의 형태로 손실을 분담하는 제도

□ (권고사항) IMF는 취약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4개 분야, 12개 권고사항을 제시했습니다.

○ FSSA 요약(Executive Summary) 국문 번역본과 함께 12개 권고사항에 대한 국문 번역본도 첨부했으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1. IMF FSAP 개요

2. FSSA 요약 국문 번역본

3. FSSA 권고사항 국문 번역본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시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 **(도입배경)**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상호연계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요국 금융부문의 안정성에 대한 주기적 평가 및 위기대응력 제고 필요성 증대

○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도입('99) → 글로벌 금융위기('08)를 계기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29개 국가*에 대한 피평가 의무 신설('10)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홍콩, 인도,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 **(평가대상*) [의무, 매5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29개 국가 (systemically important jurisdictions) + [자율] FSAP 신청 국가

* IMF 인력사정 등을 감안하여 매년 10-15개 국가 대상 평가 진행 중

※ **(한국) 1차('03년), 2차('14년) 평가 완료 → 3차('20년) 평가**

□ **(평가분야)** ①거시경제·금융 측면에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FSSA*), ②법·제도 측면에서 금융업권별 국제기준 이행 여부(ROSC**)

* Financial System Stability Assessment

** Report on the Observance of Standards & Codes

① **(FSSA) 시스템 리스크, 거시건전성, 위기관리 및 금융회사 정리 체계, 스트레스 테스트 등 평가(서술평가, 無등급)**

② **(ROSC) 금융업권별 국제기구에서 마련한 핵심준칙(Core Principles) 이행 여부(등급평가*) → 개도국만 평가****

* 각 핵심준칙별로 4등급으로 평가(준수/ 대체로 준수/ 부분 준수/ 非준수)

** 한국은 제2차 FSAP('13)에서 ROSC 평가를 받았으나, 금번 FSAP부터 선진국으로 분류되어 ROSC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발전된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중 하나이다. 2013년 FSAP 이후로 중요한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정부의 지원 기능 덕분에 금융시스템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다. 정부 당국은 금융 분야의 건전성 및 법률·감독 체계를 발전시키고, 국제 기준 및 여타 G20 국가들의 관례를 따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은행 및 전반적 금융시스템은 지난 2013년 FSAP 이후 꾸준히 성장해 왔다. 견실한 경제 성장, 새로운 규제 및 모기지 보험과 같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은행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강한 건전성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취약 요인에 대한 미시·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통해 시스템을 강화해 왔고, 위기관리 체계를 향상시켰으며, 건전성 및 법률 체계를 개선해 왔다.

3가지 요소^①저성장, ^②고령화에 따른 인구학적 변화, ^③잠재적인 부작용을 내포한 금융기술)는 한국 금융시스템에 도전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 시스템 리스크 분석 결과, 은행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상황 발생시 자본 수준에 큰 영향을 받는 금융업권은 지방·상호저축·정부소유은행 중 일부일 것으로 추정된다. GaR(Growth-at-risk)* 분석 결과 향후 몇 년간 상당한 하방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금융시스템 내에서의 전이 위험은 현재 잘 통제되고 있다. 다만, 저금리, 핀테크와 非은행 금융기관 등 등장에 따른 경쟁심화 때문에 은행 및 보험업권의 미래 전망은 불투명해 보인다. 고령화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저축·가계대출·소비·투자행태의 변화는 지속적인 구조적 부담을 초래함으로써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

* GaR: 현재 금융시장 여건 하에서 발생 가능한 GDP 성장률 확률분포에서 하위 5%에 해당하는 성장률 → 금융시장 여건을 반영한 GDP 성장률의 하방리스크를 의미

- 핀테크 발전은 많은 혜택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되지만,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 서비스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인해 은행은 수익성 저하 및 脫금융중개화(disintermediation) 압력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은행 통합이 필요해질 수도 있다. 예금자와 가계의 수익추구 경향 심화는 高위험 자산관리 서비스 및 상대적으로 투명성이 낮은 파생 증권상품의 판매로 이어지고 있다.

미시 및 거시건전성 감독 수준은 높지만 금융안정성 달성을 위한 정책추진체계는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 한국은 가계 부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으며, 18개에 달하는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가계대출 및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정책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전반적인 시스템에 끼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시건전성 정책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 한국은 엄격한 준칙 중심 감독체계를 기반을 갖추고 있다. 국제 기준의 이행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됐지만,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및 D-SIB*에 대한 Pillar 2 감독체계** 정교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모든 유형의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 수준의 감독이 체계적으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소유은행 및 소규모 예금수취기관, 증권 시장에 대한 보다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

* D-SIB: 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의 약자로
한국은 '16년부터 D-SIB을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 의무 부과 중
→ '20년도 D-SIB: 신한·하나·KB·농협·우리 등 5개 은행지주 및 이들의 자은행

** Pillar 2 감독체계: 바젤기준 규제(필라1, 2, 3) 중 하나로, 금융회사가 스스로 리스크를 인식·측정·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감독당국은 그 시스템의 적정성 점검 및 필요시 추가자본을 부과하는 감독체계

- 한국은 금융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으며, 정리제도 또한 금융

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의 핵심원칙을 대부분 이행하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금융그룹에 대한 정리계획 마련, 국제적 활동을 고려한 정리계획 수립, D-SIB의 질서있는 정리를 위한 체계 마련 등을 꼽을 수 있다.

보다 미래지향적인 모니터링 및 시스템 리스크 포착 체계를 갖추는 것은 한국의 금융안정성 및 금융감독 체계에 있어 필수 요소가 되어야만 한다. 다양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신뢰도는 방법론의 개선, 시스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스트레스 테스트 범위 확장(거주용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 부정적 충격에 대한 가계부문의 복원력, 부동산 관련 국가우발채무) 등을 통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갑작스러운 상환 요청, 펀드 및 자산관리업권의 유동성 압박 등 부문간 리스크 전이를 증폭시킬 수 있는 활동에서 야기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해 보다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非지주 금융그룹 등 금융시스템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주체들도 시스템 리스크 모니터링 대상에 편입될 필요가 있다. 외환 및 자본유출입 관련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정책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국환시장을 포함한 국내 금융시장을 보다 발전시켜야 한다. 주택시장 금융구조 및 묵시적 보조금, 연금시장, 정부소유은행의 전반적인 역할에 대한 검토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상기 국문 번역본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번역한 자료입니다. 국문 및 영문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문이 우선하며,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원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권고 사항	기관	기한*
시스템 리스크 포착 강화			
1	오픈뱅킹 시스템 및 전자화폐가 보안 및 운영상 리스크와 시장 구조에 미치는 영향 평가	금융위원회 금감원	즉시
2	전세제도로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인 차환 리스크(rollover risk), 전세보증금의 주식투자 활용에 따른 전세제도-주식시장간 연계성 증가 등에 대해 평가	금융위원회 금감원	단기
3	스트레스 테스트 방식을 개선하여, 부실채권(NPL) 판매, 외환 및 가계부문 유동성, 중소기업 대출, 증권 중개활동, 국가 우발채무 관련 취약성을 보다 정밀하게 추정	금융위원회 금감원	중기
시스템 취약성에 대한 선제적 관리 강화			
4	거시건전성 감독을 거시경제금융회의(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회의체)의 최우선 단일 목표로 지정함으로써, 금융안정 관련 정책 체계를 강화	기재부 금융위원회	즉시
5	금융지주회사의 정의를 확대하고, 비지주 금융그룹을 포함한 모든 금융그룹을 감독체계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적 권한 강화(그룹 차원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요건 마련, 비상계획 수립 의무 부여 등)	기재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즉시
6	은행권의 가계부문 담보/무담보 대출에 대한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 적립 제도 도입	금융위원회 금감원	단기
감독 강화 및 공평한 경쟁 촉진			
7	정부소유 은행의 역할 검토 및 이들 은행의 상업적 대출 및 투자활동이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건전성 요건에 최소한 부합하는지 여부 감독	금융위원회 금감원	즉시
8	보험회사에 대한 리스크 기반 감독 강화, K-ICS*의 건전하고 비례적인 이행 추진 및 고령화 위기에 대응하는 추가자본 적립 계획 수립 * K-ICS: IFRS-17 시행에 맞춰 시행되는 新지급여력제도로 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를 원가평가→시가평가로 전환하여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하는 제도	금융위원회 금감원	즉시
9	금융위원회는 전략수립, 비은행 관련 통계 부족 문제 해결, 금융시장 육성 정책 및 위기 대응 관련 역할에 집중하고, 금융감독원에 보다 많은 운영 및 집행 권한 부여	기재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단기
10	복수 사용자 연금 제도 도입 및 연기금시장 감독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연기금 및 연금시장 발전 지원	금융위원회 금감원 노동부	중기
위기관리체계, 금융안전망 및 정리제도 강화			
11	비지주 금융그룹을 포함한 금융그룹의 국제적 활동 및 해외 영업을 고려한 정리계획 수립, 정리가능성 관련 이슈의 명확화, 정리재원과 긴급유동성 지원간 관계 명확화	금융위원회 금감원	단기
12	회생법원 및 파산관재인역의 역량 향상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제도 강화	법무부	중기

* 즉시=1년 이내 / 단기=1-3년 / 중기=3-5년

상기 국문 번역본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번역한 자료입니다. 국문 및 영문의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영문이 우선하며,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원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